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홍사단, KYC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유동림 간사 02-723-5302 dryou@pspd.org)

제 목 16개 시민단체들, '성완중 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열어

날 짜 2015. 4. 28. (별첨 포함 총 3 쪽)

보 도 자 료

16개 시민단체들, '성완중 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열어

8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박 대통령의 사과와 독립적 수사보장,
수사간섭 황교안 장관 사퇴 등 요구해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30분, 청운동 주민센터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5개 회원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홍사단, KYC)는 오늘(4/28) 오전 10시 30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완중 리스트에 언급된 8인 중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측근들과 총리가 연루된 부패의혹사건에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듯이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독립적 수사를 보장할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에게 야권의 정치자금 혐의도 찾아내 수사하라는 듯이 수사방향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별첨 : 공동기자회견문

[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홍문종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6명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지난 9일 목숨을 끊은 지 이제 곧 20일이 되어갑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5개 회원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완종-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8인의 부패혐의자들은 거짓해명을 반복하거나, 핵심 증언자에 대한 회유 시도,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검찰 수사도 이완구 총리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남기업 자료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검찰이 이완구 총리 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에서 멈추고, 대통령의 측근 6명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적은 이들만 선별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시늉만 내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직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병기 비서실장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깊지만,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조치를 제시하는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